문화산책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으로 10년을 바라본다

장경화

광주문화재단 이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은 2015년 11월, 21세기 국제사회 속에 문화강국으로 도약하고 자는 국가적 미래 문화전략이었다. 그리고 안정된 ACC 지원을 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1차 특별법)은 2027년까지 연장을 요청하고 있다.

지난 10년, ACC는 시설 조성과 광주 안착을 위한 시간으로 그동안 우려했던 '도시의 섬'이라는 오명을 벗어내는 적지 않은 노력으로 일정 성과를 일구었다. 물론 상당기간 시행착오에 따른 비판과 ACC의 자체 성찰도 적지가 않았다. 이러한 시간과 성과를 바탕으로 '아시아 문화허브 광주' 정착과 지속적 확장을 위한 추가 제도적 구축이 가능할 수 있는 '2차 특별법'으로 앞으로 10년의 큰 그림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그럼, "왜 지금 2차 ACC 특별법인가?" 어찌 보면 쌩뚱스럽게 인식되어 진다. 그러나 '1차 특별법'은 시대 요청으로 '건설과 조성'이라는 목표는 이미 달성되었다. 앞으로 10년은 어떻게 살아서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의 단계에 와 있다고 본다. 즉, 효율적 운영과 실효적 내용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제도가 멈추면 정책도 멈춘다. 만일 '1차 특별법'이 연장되어 일몰(2027년)된다면, 그 이후에는 국가적 중.장기 사업의 지속성과 국제사회 신뢰의 약화와 축소로 이어져 '관리 대상 시설'로 전락이 예상된다. ACC는 지난 10년의 관람객(2,152만명) 성과에 만족이 아닌 앞으로 방향과 무엇을 더 축척시켜야 하는가? 그리고 '왜 광주인가?'에 대한 질문에 국가적 차원에 답을 담아내야 한다.

ACC 앞으로 10년은 '아시아 문화 연구.창작.유통의 국가적 거점', '광주 정신의 국제적 확산', '광주 문화생태계와의 상생' 등 지난 시간의 아쉬움을 채워야 한다. 나아가 국가가 시작한 사업은 국가책임의 명문화와 ACC 운영 거버넌스 개편으로 '지역 예술인. 연구자 참여 확대와 시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법제화'로 보다 광주시와 구체적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카이브 연구 기능이 부대 기능에서 핵심 자산으로 국제 협력 확대와 학술교류 법적 지위 등이 필요하며, 또한 전당장의 직급도 상향되어야 할 것이다.

시설적 측면으로 'ACC에는 아시아가 없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 10년으로 거대한 아시아를 담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자체가 허구일 것이다. ACC에 아시아를 담을 시설이 필요하다. 예로 '아시아 레지던스 문화박물관' 유형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아시아의 다양한 국가 예술인 체류와 전시, 문화 행사들로 전당 주변 '아시아 음식거리'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으면 한다. 그리고 ACC '예술극장'에는 전문극장이 없다. 2028년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동부경찰서' 부지를 활용, '중형 콘서트홀' 건립(1000석 규모)으로 수준 높은 전문 공연 유치가 필요하다. 현재 광주는 전용 극장이 없어 예술 공연 유치가 한계가 있다.

ACC가 1차 특별법에서 머물게 되면 앞으로 관성적 운영이 우려된다. 2차 특별법에서는 보다 광주를 녹여 담아내어 존재의 이유를 스스로 갱신할 수 있기를 광주는 원한다. 더더욱 정치적으로는 광주.전남이 통합을 서두르고 있다. 그래서 1차 특별법 일몰 시점인 2027년 이후부터 2036년까지 앞으로 10년이 더 필요하다. 논의가 필요한 골든타임이다.

문화예술 발전에 필수적 요소는 안정된 경제. 사회 속에 간섭하지 않고 지원하는 것이다. 즉, 문화예술은 돈과 시간과 열정을 숙주로 굼뱅이처럼 성장한다. '광주비엔날레'가 아시아의 대표성을 갖추기까지 3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 'K-문화강국'과 '지방시대'를 준비하는 '대한민국'과 '광주'가 '2차 특별법'으로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명제에 대한 답으로 생각된다. 우리는 오늘을 차갑게 통찰하고 미래를 읽어내는 예지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기고

민간공항,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최만길

화가(갤러리자리아트 대표)

작년 말, 18년 만에 광주 군공항을 전남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후 이달에는 '광주 민군통합공항 무안 이전'에 합의 당사자인 광주시·전남도·무안군을 비롯해 국토교통부·국방부 등이 참석하는 6자 협의체 실무단 협의가 청와대에서 열리기도 했다.

또한 군공항 이전을 위한 이해 당사자의 역할과 관련 조속한 군공항 이전을 위해 공사 기간 단축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발 빠르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인다. 광주시의 입장에서 보면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공항 이전 문제가 구체적으로 추진되어 간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한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번 군공항 이전이 현재 존치하고 있는 공항 자체의 완전 폐지를 전제한 것에는 이견이 있다. 분명한 것은 군사시설과 함께 운영돼 왔던 기존 공항 이전 검토는 공항소음공해로부터 였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현 공항에서 군사용 전투기 이륙문제가 해결되고, 민간여객기 전용 공항으로 탈바꿈 한다면, 그 점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만약 이러한 결과가 예측 가능하다면 필자는 공항이전과 관련해 뒷북이라고 하더라도 군 시설만 이전하고 민간 공항으로서의 시설은 그대로 존치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광역시인데 민간공항이 없는데다 서울로 가는 노선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어느 사업을 추진하든 어느 정도의 장단은 있다. 그러나 보다 장기적 관점과 미래지향적 입장에서 민간 공항의 존치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게 필자의 주장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민간공항의 존치의 당위로서 꼭 고려해야할 몇 가지 사항을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민간공항은 단순한 지역민의 환경 편의만이 아닌, 한 도시가 어떤 위상으로 성장할 것인가 하는 미래 비전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오늘날 공항은 단순한 교통의 인프라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한 도시의 공항은 기업 투자유치의 전제 조건이 되기도 하며, 국제교류와 자본 및 관광과 인재, 기업과 정보 등이 드나드는 도시 경쟁력의 핵심 관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광주의 민간 공항은 존치되어야 한다.

둘째, 광주라는 도시의 지정학적 역할 부분에서도 민간공항은 필요하다. 명실공히 광주는 호남권의 중심도시며 AI, 미래차, 기타 문화콘텐츠 산업의 장래 전략지역으로서 위상이 크다. 그뿐 아니라 광주민주화의 성지로서 역사적 가치와 전남, 전북 서남권을 잇는 관문도시로서 기대되는 역할 또한 크기 때문이다.

셋째, 앞으로 국가 전략적 측면에서 지방 분권화 정책은 보다 중요한 이슈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때 광주가 민간 공항을 상실한다면 광주는 사실상 서남권의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떨어뜨릴 것은 너무나 뻔하다. 이것은 바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현재 문제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겠다는 국가계획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밖에 광주공항이전에서 민간공항까지 없애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이후 초래될 문제는 많다고 본다. 민간공항의 유지는 단순한 시민들이 감수해야 할 비용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한다.

우리는 지금 미래의 광주를 살아 있는 서남권역의 관문으로 남게 할 것인가, 아니면 변방으로의 격하를 스스로 선택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공항이전과 관련하여 앞으로 보다 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논의가 활발히 이어져 신중한 결정으로 마무리되길 바란다.

※ 위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취재수첩

수어는 생존언어…통역 인프라 확충을

송태영

사회부 차장대우

"모두가 수어 알리기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2월3일 광주 광산구 광주보훈병원에서 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수어통역지원센터 서비스를 받은 한 농아인 부부의 말이다.

한국 수어의 날을 맞아 기자가 직접 동행해보니, 농아인이 세상과 원활히 소통하기 어려운 현실을 체감할 수 있었다. 현장에서 만난 농아인은 그동안 쌓였던 답답함을 풀어내듯 수어통역사를 만나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고,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다.

30여 년 경력의 베테랑 수어통역사 역시 농아인이 지루하게 진료 순서를 기다리지 않도록 농아 관련 정보와 현재 몸 상태, 근황 등을 자연스럽게 나누며 소통을 이어갔다.

농아인 부부는 서로를 의지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집 밖을 나서는 순간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힌다. 사회생활 자체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코로나19를 거치며 TV 방송에 수어통역이 등장하면서 수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졌다. 하지만 농아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수어통역지원센터는 연평균 농아인 300여명에게 7300여건의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가 개발한 스마트폰 앱 '빛고을 수어누리' 역시 서비스 신청이 조기 마감될 만큼 수요가 높다.

비장애인에게 수어는 여전히 낯설고 어렵다. 농아인을 직접 만날 기회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소통은 인간 관계의 기초를 다지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교류하며 관계를 형성한다. 농아인 대부분은 듣지도 말하지도 못해 긴급상황 발생 시 수어통역사에게 영상통화를 하며 힘겹게 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제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 지역사회가 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가는 농아인에게 연결고리를 만드는 데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수어통역사 확충과 한국 수어 홍보 캠페인 등 실질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독자투고

쓸쓸한 독거노인 살펴보자

농촌이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자식들은 객지로 떠나면서 농촌 마을은 홀로 사는 노인들이 눈에 띄게 느는 추세다. 예전 같으면 어른 대접을 받았을 50대 나이는 이젠 젊은이 축에 속할 정도이니 현 농촌의 실태를 알만하다.

그나마 부부가 같이 살고 있는 가정은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홀로 사는 독거노인 세대가 많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기정사실이다.

혼자 사는 노인들이 외로움에 지쳐 있지만 사회의 냉대 속에 선뜻 도움을 요청하지 못해 쓸쓸히 노년을 맞고 있는 노인들도 많은 실정이다. 사회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쓸쓸하게 죽음을 맞는 홀몸노인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은 비교적 지역 공동체 의식과 유대가 강한 농어촌에서조차 이웃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외롭게 숨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을 정도다. 고령화로 접어들면서 부양 기피와 학대 현상 등이 발생하면서 대책 마련도 요구되는 이유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 차가 심한 요즘 우리 주변의 홀로 사는 노인들을 찾아 한 번쯤 이들을 찾아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며 안부를 살피는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찾는다면 따뜻한 계절이 되지 않을까 싶다. 홀로 사는 노인들은 단지 마주 앉아 자신의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말동무가 되어주는 것을 더 반긴다. 내 부모를 아끼고 사랑하듯, 주변의 혼자 사는 노인을 보살피고 챙겨 홀로 안타깝게 쓸쓸히 죽음을 맞는 노인들이 없기를 기원해 본다.

김덕형 장성경찰서 삼서파출소장

사설

최후관문 넘은 광주·전남통합, 내실 다질때

광주시·전남도 행정통합이 거침이 없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1월 2일 광주·전남을 하나로 하는 '통합 지방정부 추진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지 한 달여만에 행정통합의 마지막 관문격인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의 동의까지 받아냈다. 이에 앞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약속 등도 얻어냈다. 1986년 분리된 지 40년 만에 광주·전남이 다시 하나 되는 '메가 지자체' 출범이 가시화된 것이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4일 제34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광주·전남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동의)의 건'을 재적 의원 23명 중 22명이 참석,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전남도의회도 이날 제3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60명중 53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52명, 기권 1명으로 찬성 의결했다.

이번 동의절차는 지방행정체제의 근간인 지방자치법 5조 규정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는 지자체를 폐지·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돼 있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 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는 예외규정을 뒀다. 즉, 지자체 통·폐합시 지방의회 의견이나 주민투표 중 하나를 선택해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광주시·전남도는 가장 강력한 민의수렴 절차지만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주민투표 대신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동의 절차를 선택한 것이다.

시도의회 동의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국회의 시간'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관련 특별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와 정부 부처와의 특례 협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이달 말 임시국회를 통과할 예정이다. 이를 넘어서면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작업이 3월부터 본격화되고 6월에 초대 시장 선출, 7월 1일 광주·전남 통합 지방정부인 '전남광주특별시'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문제는 통합과정, 또는 통합후에도 주청사 소재지 문제, 지속 가능한 재정 안정 방안, 통합의회 의원 정수, 학군 불균형, 국립의대 신설 등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데 있다. 실제 시도의회 의결 과정에서도 행정통합에는 찬성했지만 무리한 속도전과 부실 추진에 대한 우려 등이 잇달아 제기됐다.

이에 남은 기간 동안 이런 우려들을 특별법에 녹아내리기 위한 지역사회의 역량 결집이 절실하다. 이제부터는 특별법의 내실화를 다질 때라는 얘기다.

광주형 원스톱 응급의료 플랫폼 성공하길

'광주형 원스톱 응급의료 플랫폼'이 눈에 띈다.

광주시가 제때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환자들의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시스템이 구축돼 최근 가동에 들어간 것이다.

이 플랫폼은 한마디로 지역 21개 응급의료기관의 병상·의료진·장비 등 자원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한 것으로 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응급환자 이송지연, 과밀현상 등을 줄이고 가장 적정한 병원으로 빠르게 전원할 수 있게 한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700여개의 응급의료 정보를 데이터 베이스화해 질환별 진료가능 여부, 병상 현황, 의료진·장비 현황 등을 통합 관리, 의료진과 119 구급대원이 모바일·PC를 통해 응급환자 이송과 진료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이들 의료기관들을 '하나의 병원'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 응급환자가 응급실 도착 즉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만들었다는 얘기다.

필요 시에는 플랫폼 내 '환자 전원 기능'을 활용해 수술·시술 등 최종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지체 없는 연동할 수 있게도 했다.

또 분초를 다투는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치료 지침과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수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수 전문의가 의사 결정을 해 적정 병원을 정하는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결정팀' 체계도 마련했다.

광주시는 이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준비에 그동안 공을 많이 들였다.

지난 2024년 10월부터 플랫폼 구축에 들어가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응급의료 자원조사를 실시했고 지난해 7월에는 이를 바탕으로 전남대병원·화순전남대병원·KS병원 등에서 시범 운영도 했다. 이어 10월에는 응급의료기관 대상 설명회, 12월에는 사용자 실습 교육과 현장 교육을 마쳤다.

한정된 응급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생사기로에 놓인 시민들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겠다는 이 플랫폼이 광주를 넘어 전국 표준 응급의료체계로 자리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장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정치부	370-7040	논설실	370-7200
경제부	370-7020	임원실	370-7000
산업부	370-7010	총무국	370-7093
사회부	370-7030	사업국	370-7090
문화체육부	370-7234	광고국	370-7070
편집부	370-7082	독자관리국	370-7080
사진부	370-7050	서울지사	(02)978-709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